

‘사화’(士化)하는 사무라이들에 의한 메이지 유신론

[서평] 박훈(2014),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민음사, 242쪽.

이 새 봄*

1.

우리는 흔히 일본과 비교하면서 근대화에 실패한 조선을 비난한다. 일리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대로 당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다. 조선은 열등했다기보다는 평범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 특이했던 것이다. 헌법, 의회, 선거, 국민국가, 자본주의 등 서유럽이 ‘발명’해 낸 것들은 거의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낯선 것이었다.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왜 유독 일본은 이를 신속히 받아들였고, 큰 파탄 없이 사회 변혁에 성공했던 것일까? 대체 그 시기 일본열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5~6쪽)

20세기 어느 시점부터인가 ‘근대’라는 말은 구체적이면서 보편적인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역사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 ‘근대’성을 기준으로 역사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

*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강사

본은 항상 한국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대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이 근대화에 실패하는 바람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논리가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인의 정서의 바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에 뒤처진 한국은 ‘열등’하다거나, 근대화에 적합한 ‘특이’한 여건을 갖추었던 일본은 우월하다는 식의 논리는 ‘근대’가 애초에 서구의 제한된 조건 속에서 특수하게 ‘발명’된 요소들에 의해 탄생한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게 한다. 조선의 ‘평범’함이 ‘열등’으로 연결되지 않듯이, 일본의 ‘특이’함이 우월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위의 문장은 그러한 저자의 생각이 잘 나타난 대목이다. “근대란 어디까지나 유럽에서 특정 시기에 우연적 요소와 유럽인의 치열한 주체적 노력까지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생한 특수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하는(138쪽) 저자는 ‘근대’를 추구했어야 할 절대가치로 보지도 않거니와 애초에 역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 진행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듯 ‘근대’를 절대가치로 두지 않는 박훈 교수는 우열의 문제를 떠나, 어째서 일본은 서구의 ‘발명’인 근대화의 요소들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었고, “큰 파탄 없이 사회변혁에 성공”했는지, “대체 그 시기 일본 열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건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궁금증들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의 배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대외 인식과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간 것이 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2.

메이지 유신 전후로 막말유신기(幕末維新期)라고 불리는 시기의 정치사는 다수의 정치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기존의 도쿠가와[德川] 체제를 붕괴시키고 메이지의 새로운 질서를 성립해가는 과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메이지 유신은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결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정치 세력이 일관된 정치적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움직인 운동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막말유신사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기란 쉽지 않다. 일본 자국민을 대상으로도 어려우니 외국인, 더군다나 일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지닌 한국인 독자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면 더욱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곤란함이 전제된 과정에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의 저자는 도전한다.

수많은 기존의 막말유신사 연구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선명한 스토리 라인을 제시하는 데에 열중했다. 일본 전후역사학의 흐름을 보면 한편에는 마르크스주의적 유물사관에 입각해 현 체제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둔 논리적 틀로 메이지 유신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그 대척점으로서 근대화론에 입각해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특수한 배경/원인을 그리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연구들이 있었다. 양측 모두 각각의 목적의식이 분명했기에 복잡한 사실(史實)들을 일관된 논리로 꿰어 막말유신사의 전체상을 그려내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분야의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의 논리적 틀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틀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유신의 전체상을 그려내기 보다는 개별적 사안에 집중하는 실증 연구들이 현재 막말유신사 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국내는 물론, 과거 높은 수준의 막말유신사 연구를 생산해 냈던 영어권 연구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본서의 저자는 이와 같은 현재 막말유신사 연구 상황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서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한다.¹⁾ 본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지닌 문제점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하나는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전통’을 버리고 ‘근대’가 시작되었다는 식의 논의, 다른 하나는 ‘전통’을 대표하는 도쿠가와 정권이란 그러한 변화에 뒤쳐진 무능하고 낡은 관습에 빠져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논의이다. 물론 메이지기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서양식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도쿠가와 정권이 250년 이상의 태평성대의 세월을 보내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졌던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메이지 유신이 설명되어온 방식은 ‘근대’화를 찬양하고 그 이전의 역사적 맥락을 소홀히 하며, 사쓰마[薩摩]·조슈[長州]와 같은 ‘승자’ 중심의 일방적인 관점을 유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²⁾

이러한 연구 경향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사상사 분야에서는 기존의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전통’과 ‘근대’가 단절되었다는 논의 대신 그 전후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었고, 정치사 분야에서는 사쓰마/조슈와 같은 메이지 정부의 주역을 배출한 ‘승자’ 이외에 도쿠가와 막부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 주체들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여 그 의의를 밝혔다. 본서는 이러한 두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저자 고유의 연구 성과와 접목시킴으로써 메이지 유신에 대한 내러티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 박훈(2014), 『“연속하면서 혁신” - 幕末정치사와 明治維新을 보는 시각』(『日本歴史研究』 제40집)이라는 글을 통해 일본의 막말유신사 연구 현황과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2) 비단 학계뿐만이 아니라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와 같은 작가에 의한 역사 소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서 말미의 ‘더 읽을 거리’에도 소개되어 있는 三谷博(2006), 『司馬遼太郎-「国民史」の追求、「昭和」への嫌悪』(『明治維新を考える』有志舎, 2006년 [2012년에 岩波現代文庫로도 출판됨])를 참고했다.

3.

전체 다섯 개의 장은 위와 같은 맥락을 의식하며 신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1장 「도쿠가와 체제의 구조와 특징」에서 우선 도쿠가와 체제에 대한 개설적인 설명부터 시작한다.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정치 체제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천황(天皇), 사무라이[侍], 그리고 막부(幕府) 등 막말기에 활약하는 중요 정치세력들에 대한 설명과 그 상호 관계들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해준다. 또한 군인인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도쿠가와 사회의 내부적인 특성과 소위 쇄국정책이란 무엇이었나를 자세하게 해설하여 일본이 개국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의 조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본서 머리말에도 언급했듯이 사실 “도쿠가와 체제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한글로 된 책”이란 별로 없다. 평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용어부터 시스템의 운용 논리까지 모든 것이 낯선 도쿠가와 정치 체제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일본의 개설서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본에서 출판된 개설서의 경우, 일본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사에 대한 이해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외국인 독자들로서는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거니와 그 개별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백과사전식의 항목별 설명이 아닌, 도쿠가와 체제 전체의 구조와 그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끔 풀이해주는 박훈 교수의 해설은 매우 소중하다. 물론 본서의 구성상 최소한의 필요한 지식만을 선별했기 때문에 독자에 따라서는 다소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1장의

유용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주제인 메이지 유신으로 달려가고 싶은 독자들은 건너뛰어 2장부터 읽어도 좋겠다”고 말하지만, 될 수 있는 한 1장부터 읽어볼 것을 추천하고 싶다.

2장 「일본은 어떻게 서양 문물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었나」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서양 문명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검토하고 있다. 박훈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누구보다도 빨리 일본이 서양의 위압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를 일본이 느낀 ‘강렬하고도 과장된 위기감’에서 찾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위기감은 쇠국이 아닌 적극적인 체제 변혁을 가져왔다. 2장에서 저자는 위기감의 고조와 함께 본격화된 ‘해외 웅비론’(海外雄飛論)의 논의들과 동시대의 조선이나 청과의 비교를 곁들여 개항을 둘러싼 각 정치 세력이 보인 입장을 소개한다. 곳곳에 인용된 1차 자료들은 막말 정치사의 핵심적인 논의를 보여준다. 한국 독자의 입장에서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내용을 직접 1차 자료를 통해 읽음으로써 그들이 느낀 위기감이 얼마나 긴박한 것이었고 또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전개했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장 「도쿠가와 막부는 왜 패했는가」는 도쿠가와 막부를 중심에 놓고 기성 체제의 붕괴가 진행된 과정에 주목한다. 저자는 ‘변혁 세력’, 즉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데 성공한 메이지 정부 세력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서서 구체제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내포되었던 ‘정치적 약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도쿠가와 막부의 약점 찾기에만 연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메이지 유신은 그 시기 도쿠가와 막부의 여러 역사적 선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결론적으로 말해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공로의 반은 도쿠가와 막부에 돌려야 할 것”(9쪽)이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막부의 자기 혁신을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쇼군[將軍]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의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막부의 붕괴를 가져온 것이라는 내용이 저자의 생각이다.

4.

3장까지가 도쿠가와 체제에 대한 설명 위주의 내용이었다면 4, 5장은 기성 체제에 대한 비판 혹은 새로운 시대로의 변혁을 가능하게 한 유학(儒學)의 영향을 중심으로 막말유신기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이 두 장은 저자가 기존에 발표해 온 연구 성과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서술한 부분으로 ‘사대부적 정치문화’와 ‘사회’(士化)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사대부적 정치문화’란 저자가 명명한 개념으로 동아시아의 사대부들에게서 널리 보이는 공통의 정치 행동을 뜻한다. 그 특징은 “학적(學的)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정치조직을 만들고(학당(學黨)), 상서를 이용하여 정치 투쟁을 벌”이며 “자신을 천하공치(天下公治)의 담당자로 여기고 군주의 친정(親政)을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135~136쪽) 본래 武人인 사무라이가 ‘사대부적 정치문화’에 젖어들으로써 점차 자신들을 ‘士’로 규정하게 되어간 것, 그것이 ‘사회’의 의미이다.

저자의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유학(儒學)과 ‘사대부적 정치 문화’가 의외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메이지 유신 이해가 ‘서양의 충격’(Western Impact)을 일반적으로 강조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론이다. 즉,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사무라이 사회라는 비동아시아적 사회”였던 일본이 “서양의 충격을 받아 급속히 근대화의 길로 달려갔다” 식의 인식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박훈 교수는 ‘근대화’를 향한 일본의 특수한 조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며 ‘서양의 충격’만을 강조한 선행 막말유신사 연구들과는 달리 동아시아적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메이지 유신의 과정에 접근한다. 물론 저자가 ‘서양의 충격’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이외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제안할 뿐이다. 그 요소가 바로 일본 통치 엘리트들의 “유학, 혹은 동아시아(중국) 국가 모델에 대한 지향”이다. ‘사대부적 정치문화’와 ‘사회’는 그러한 지향성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의 문제의식이 “유학에 근대적 요소가 있었다든가, 유학을 오늘날에 되살려야 한다든가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다만 조선이나 청과는 다른 시기적·사회적 맥락 하에서 나타난 19세기 일본 사회와 유학의 흥미로운 관계 양상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 5장에서는 같은 시기의 조선이나 청의 상황과의 비교가 자주 등장하여 유학이라는 코드를 통해, 즉 동아시아적 맥락 속에서 일본의 사정을 분석한다. 특히 곳곳에 삽입된 조선의 정치 제도나 이념과의 비교 고찰은 한국인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대부적 정치문화’가 위축되어 가던 19세기의 조선이나 청과는 반대로 ‘무인의 나라’ 도쿠가와 일본에서는 이것이 성행하여 “전에 없던 정치적 활력을 가져와 막번 체제(幕藩體制), 즉 도쿠가와 사회의 동요와 새로운 정치 질서의 형성을 이끌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170쪽)

4장 『유학의 확산과 ‘사대부적 정치 문화’의 형성』에서는 이와 같이 도쿠가와 시대에 유학이 점했던 위치와 그 변화 양상에 대해 개괄하면서 저자의 ‘사대부적 정치 문화’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이를 토대로 마지막 5장 『‘사회士化’하는 사무라이와 메이지 유신』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회’한 사무라이들의 행동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저자가 19세기 일본의 정치 사회에 나타난 ‘사대부적 정치문화’의 대표적인 요소들로 꼽는 첫째는 ‘학적(學的) 네트워크와 학당(學黨)의 출현’, 즉 당파 정치의 등장이다. 18세기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번교(藩校), 사숙(私塾), 향교(鄕校)를 비롯한 각종 연구회를 중심으로 사무라이를 비롯한 상층 민중 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저자가 이를 굳이 ‘학적(學的)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이 조선의 학파와 같이 경직되어 있다거나 엄격한 상호 배타성을 지니지 않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느슨한 관계망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망들이 정치화를 거듭하여 메이지 초기의 폭발적인 정치결사 유행으로

이어졌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사대부적 정치문화’를 보여주는 두 번째 요소는 상서(上書)의 활성화다. 급격하게 확산된 ‘학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와 별 인연이 없던 일반 사무라이들이 대거 정치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때 그들이 주요 정치 수단으로 삼은 것이 “사대부적 정치문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상서이다. 이러한 특징 역시 메이지 유신 이후의 신문을 통한 공의여론(公議輿論)의 형성이라는 문화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도쿠가와 시대가 메이지 시대와 단절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요소로는 “군주 친정(親政)의 요구”가 꼽힌다. 천황의 친정을 실현한 메이지 유신의 바탕에는 사무라이 사회 내부에서의 군주 친정 요구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도쿠가와 시대에 천황은 물론, 쇼군이나 다이묘[大名]는 정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신하들 역시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학이 보급되면서 군주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공통의 비전이 생긴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전이 천황의 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발전해 메이지 유신에 이르게 되었다.

5.

본서의 후반 두 장은 ‘사대부적 정치문화’와 메이지 유신의 관계를 고찰한 박훈 교수의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본래 일본정치사를 전공으로 하는 저자는 구체적으로는 미토(水戸)번, 쿠마모토(熊本)번, 조슈(長州)번 등 몇몇 번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 본서에서 언급된 ‘사대부적 정치문화’의 사례들도 대부분 이들을 중심으로 소개가 되어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4, 5장에서 언급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은 도쿠가와 체제하에서 유학을 배운 사무라이들의 ‘사대부적’ 열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됨으로써 저자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더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들 사례가 당시에 전국적인 파급력을 지닌 것이었음은 분명하나, 이들이 당시 일본 사무라이 사회 상황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에 저자의 주도면밀한 서술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독자들에게 자칫 일부를 통해 전체를 규정지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할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가 생겨난 이유 자체가 저자의 연구가 지닌 획기성에 기인함을 생각할 때 이는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박훈 교수의 막말유신사 연구는 지금까지 사상사 영역에서만 논의되어온 메이지 유신에 유학이 미친 영향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인 정치사적 사례들과 접목시킴으로써 메이지 유신과 유학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냈다는 점에서 일본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저자의 『一國史』에 국한되지 않는 비교사적 관점은 메이지 유신을 보편적인 역사 문제로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일조했다.³⁾ 자신이 “읽은 사료의 범위 내로만 서술을 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 약간 ‘울퉁불퉁한 글’”이 되어버렸다는 저자의 고백(225쪽)은 그러한 연구자로서의 지적 성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일 것이다.

전문연구서가 아닌 서울대 인문 강의 시리즈의 일환으로 간행된 본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사적 의미에서의 획기성만이 부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가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비전문가에게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있다는 부분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메이지 유신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닌 만큼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나, 사실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 전

3) 19세기 동아시아 정치사의 맥락에서 막말유신기의 정치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저자의 문제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朴薰(2015), 『東アジア政治史における幕末維新政治史と“士大夫的政治文化”の挑戦—サムライの“土化”』(清水光明編 [アジア遊学185] 『「近世化」論と日本』—「東アジア」の捉え方をめぐって』勉誠出版)에 잘 정리되어 있다.

후의 사정을 이야기로 풀어나간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더군다나 한국 독자들의 이 주제에 관한 일반적인 지적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해당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들을 반영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쿠가와 체제 내부의 특징들과 유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한 과정에 초점을 맞춘 본서의 명쾌한 설명에서 그러한 어려움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다.

저자의 지적대로 한국 사회도 이제 “메이지 유신을 객관적으로, 또 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근대 일본의 역사를 ‘근대화’나 ‘일본 모델’의 매력과 연관 지어 답을 정해놓은 채로 접근하려는 자세를 지양해야 할 때가 된 지금, 평자는 본서가 그러한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자 안내서임을 확신한다.

